



뇌물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도 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공직자 청렴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가운데 불명예스럽게도 부패가 심한 국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그 주원인은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부패를 상징하는 뇌물은 경제 영역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삶의 역사에서 뇌물의 뿌리는 매우 깊은데, 구약성경 신명기에는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뭉개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구약성경이 기록된 옛날에도 이미 뇌물이 널리 존재했다는 증거가 된다.

경제학은 대체로 뇌물을 거론하지 않는다. 스웨덴 경제학자인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은 “부패는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연구의 주제로써 거의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전통적으로 부패는 경제학자보다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의 관심사였다. 정치와 무관한 경제학을 표방하는 최근의 경제학자들에게 뇌물은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뇌물과 부패를 주제로 저술된 경제학 서적은 여간해서 찾아볼 수 없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뇌물?

뇌물의 사전적 정의는 ‘매수할 목적으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다. 선물로 포장되었으나, 사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라는 뜻이다. 물론 돈이 오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뇌물은 아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정상적 거래에서도 돈은 오간다. 하지만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뇌물을 주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비용과 이익 관점에서 이를 극명하게 밝힐



수 있다. 뇌물을 주는 행위가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뇌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뇌물제공에 수반된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뇌물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받은 돈의 일부를 제3의 계좌로 되돌려주는 형태의 뇌물을 리베이트(rebate), 또는 킱백(kickback)이라고 부른다. 리베이트는 원래 환불하거나 할인해준다는 뜻인데, 깎아준 돈이 원래 계좌로 들어가면 정상적인 할인이지만, 제3의 계좌로 가면 뇌물이다. 받은 돈의 일부를 발로 차서 되돌려 보낸다는 뜻의 킱백은 뇌물이 제공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이다. 이 밖에도 ‘돈을 뒤로 몰래 주는 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백핸더(backhander)도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을 받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주려는 사람보다는 입장이 다소 가벼운 편이다.

뇌물을 받는 사람은 일차적 비용은 없고 오직 적은 비용이 있을 뿐이지만, 그마저 제공자보다는 비용(발각될 경우의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예컨대 국가 권력자가 무기 중매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뇌물을 제공한 회사는 처벌을 받더라도 권력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형사 책임을 질 경우에도 몇 년 정도 수감하고 나와 빠돌린 뇌물로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진국은 뇌물수수에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제공을 철

저히 금지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자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으로 수출에 관련된 뇌물에 대해서는 적당히 눈감아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무기회사가 제공하는 뇌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1934년 증권거래법과 1977년 해외부패행위법을 제정한 미국은 외국의 공직자에게 모든 향응과 뇌물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른바 ‘록히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까지 개입하는 뇌물, 퇴치할 수 있을까?

무기 판매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경쟁 이면에는 은밀한 뇌물수수가 무성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탈리아가 공급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국가는 1994년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끝내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만델라를 선출했는데, 흑백통합 정권이 수립된 후 과거 백인 정권이 세운 과도한 국방예산과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핵무기를 대신해 재래식 무기의 대폭적 증강이 필요하다는 세계 무기회사들의 마케팅 효과로 남아공은 공군의 기종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에 영국의 노력은 회사 차원을 넘어섰다.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는 1994년 남아공을 방문

해 영국 무기를 사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만델라에게 직접 전달했고, 영국 관리들은 남아공의 집권당과 군부에 정치자금과 개인의 이득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1995년에는 영국 여왕도 국빈 자격으로 남아공을 방문하기도 했다. 영국이 판매하고 싶은 무기는 훈련기 호크(Hawk)였으나 전망이 밝지 않아 스웨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영국은 훈련기를, 스웨덴은 전투기 그리펜(Gripen)을 공급하기로 공동제안서를 남아공에 제출했다.

남아공은 처음 단일 기종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영국과 스웨덴의 요구를 받아들여 훈련기와 전투기 2종으로 변경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아공의 공군이 기술평가한 각국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훈련기 중에서 호크는 최하위였고, 전투기에서는 그리펜이 꼴찌를 차지했다. 더구나 가격은 제일 고가였다.

그러자 새로운 조건인 자금지원계획이 추가되었다. 남아공은 전투기 구매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제출한 회사는 오직 영국-스웨덴 컨소시엄이

라고 발표했다.

처음에는 입찰안내서에 자금 조항은 없었으나, 만델라 대통령이 물러난 1999년 남아공은 대규모의 무기 구매를 공표하면서 호크와 그리펜이 선정되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무기 거래와 관련된 체증은 엄청난 정치 문제로 비화했다. 남아공 집권당의 한 국회의원인 무기 구매비에서 300억 달러 이상이 중개 수수료와 뇌물로 쓰였다고 고발했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외국으로 망명했다.

시간이 지난 후 영국 회사(British Aerospace)로부터 약 2억 달러의 부정한 자금이 남아공으로 유입되었음이 밝혀졌고, 무기 획득 책임자는 뇌물 수수가 발각되자 해외로 탈출했으며, 기타 다수의 전 현직 정치인도 연루되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공동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공정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뇌물을 퇴치할 수는 없을까? **KIIF**